

문 대통령 전북 방문의 의미는?

‘극일 - 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

제조업 부진 따른 경제 타격으로 방문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전북을 방문해 지역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의 방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격려했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 국산화를 응원한다는 성격도 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전주 효성첨단소재 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했다. 전주는 정부가 탄소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탄소소재는 무게가 철의 4분의 1 수준이면서 강도는 10배나 높아 ‘꿈의 첨단소재’로 불린다. 수소차의 핵심 소재이고 풍력발전, 방산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되고 있어 계속 수요가 늘고 있다. 2015년 30조원 수준이었던 탄소섬유와 복합소재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5년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효성첨단소재는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1개 2000여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10개 2만4000여개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가 인건 생산유발효과는 2조5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직접고용 2300명을 포함해 1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효성의 투자 결정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8조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에타 면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도와 전주시도 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인허가 신속 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탄소섬유는 미래 핵심 소재로 꼽히지만 대일(對日)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도레이 등 일본 기업이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가장 타격이 큰 분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소재 국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섬유 분야에서 우리는 후발 주자”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술을 개발해 왔지만 아직 경쟁력이 뒤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행히 2011년 효성이 마천내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고 2013년 첫 양산을 시작했다”며 “효성의 탄대한 도전과 과감한 실행을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장점과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탄소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소재다.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효성은 1969년 창업 이래 기술독립을 추구하며 한 우물 파운 소재 전문 기업”이라며 “경쟁진 70%가 공학 전공 엔지니어 출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전주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끝난 뒤 탄소섬유가 플라스틱 저장용기를 감아서 성형하는 수소저장용기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하림 익산공장에서 열린 식품산업 활성화 기업 현장방문 행사를 마친 후 생산 공정 노동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전주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끝난 뒤 탄소섬유가 플라스틱 저장용기를 감아서 성형하는 수소저장용기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하림 익산공장에서 열린 식품산업 활성화 기업 현장방문 행사를 마친 후 생산 공정 노동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 사진기자단 제공)

전주 효성 첨단소재 방문 1조원 투자 격려 ‘꿈의 첨단소재’ 탄소섬유 국산화 중요성 강조 익산 식품업체 하림 신규투자 계획 확인

다. 한마디로 엔지니어가 모여서 엔지니어가 경영하는 기술 중심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조 회장은 “저를 비롯한 모든 효성 임직원들은 세계 최고의 소재강국 대한민국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그리고 이곳 전주를 세계 최고의 탄소산업 메카로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공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식품 전문기업 하림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식품 생산기업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하림은 전북 지역에 2024년까지 88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0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림 푸드 트라이앵글(Harim Food Triangle)’이라는 이름의 이번 투자 계획은 익산 지역에 도계가공시설, 종합식품단지, 최첨단 육가공 공장을 건립해 농식품 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하림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34개) 중 유일하게 지방 중소도시에 본사를 확장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

다. 전북은 이번 투자가 ‘아시아마트농생명밸리’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또 다른 농생명 식품기업의 투자를 촉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하림의 투자 계획을 듣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하림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하림은 인구 30만명이 안 되는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 속에서 오히려 지역 소도시에 있는 본사를 확장하며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모범이 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 전북의 중점산업인 식품산업에 민간기업이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우리 식품산업 더 나가 대한민국 경제가 이곳 익산에서부터 다시 활력

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기업을 격려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응원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역 행보는 일본의 수출 규제, 글로벌 경제 불안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북은 최근 제조업 부진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5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지되며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 GM 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어 왔다.

/뉴시스

정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에타 면제 방안 확정

대학·연구소 기술 이전, 상용화 촉진 방안도 확정 靑 대통령경호처 인력 증원… 재외공관 제도 정비 시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농가 방역 점검 의무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라 전략품목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기 위해 일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 시스템 스마트 제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이달 들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에서 배제하면서 국내 산업의 생산·투자 불확실성이 높아 지자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수립했다.

아울러 정부는 ‘테크브리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도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핵

심 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대통령경호처 직제 개정안을 의결해 경호 체계 강화 및 국민친화적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8명(4급 2명, 5급 7명, 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했다.

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인력 8명(6급 1명, 7급 7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해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않은 공사관, 영사관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재외

공관의 종류는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으로 나뉘게 된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지자체장이 농가에 대해 가축방역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축 소유자나 관리자뿐만 아니라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해야 하며,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한 보상을 환수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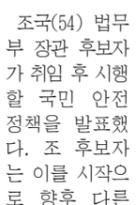
“국민 일상 안전 책임질 것”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 발표

출소 아동성범죄자 1대 1 밀착 감시

데이트·가정폭력 관련 법 개선

폭력 사용 집회·시위 엄단 방침 등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시행할 국민 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분야의 정책 등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해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법으로 즉시 체포하는 한편,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어겼을 때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정폭력 범죄자도 전자장치를 통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폭력을 사용한 집회·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 후보자 생각이다.

조 후보자는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욕해도 처벌되지 않고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청와대 앞 집회·시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화와 타협, 양보 정신이 아닌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남아 있다. 폭력을 사용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대안정치, 창당준비기획단 발족 못해… 인선부터 막혀

창당준비기획단·정책추진단·수석대변인단 조직 구성안

조직보다 외부 인재영입 중요하다는 내부의견 작용한 듯

제3차대 구축을 위한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의 창당준비기획단 출범이 연기됐다. 의원확대를 위해 조금 더 논의하자는 내부 의견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안정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의원총회를 열고 창당준비기획단 체제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유성엽 임시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많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지만 기록된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진형과 회포를 막고 일하는 국회, 칭찬받는 정치 구현을 위해 우직하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오늘 신당 창당 추진체계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대안신당을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 후 브리핑에서는 “추진체

계는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인선은 내부 상의를 통해 금명간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임시대표는 “내각 창당준비기획단, 정책추진단, 수석대변인단 이렇게 구성했다. 조직별로 간사를 두기로 했고 구체적인 인선은 나중에 논의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함께 할 수 있는 외부의 새로운 인물”이라며 “그들을 물색하고 잘 찾는 문제가 조직 문제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대안정치 다수 관계자는 오는 추석 이전 창당준비기획단을 발족하고 올 11월 초 창당하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유 임시대표는 이에 “아무리 늦어도 연말, 연초에는 출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가급적 빨리하면 좋겠지만 여러 여건,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안정치 내에서 외부 인재영입은 유 임시대표를 비롯한 박지원·장병완·전정배 등이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 임시대표는 인재영입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면 발표하지 않겠나? 반드시 추석 전에 해야 한다는 식으로, 줄속으로 할 일은 아니다. 외부 인재영입은 상대적으로 또 중요한 게 때문에 추석에 맞춰 서두를 것”이라고 답했다.

대안정치는 국회에 대안정치 연대를 비교섭단체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 국회법상으로는 무소속 의원은 한명 한명이 개별적인 비교섭단체로 분류된다. 20명 이상이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다수가 하나의 비교섭단체로 묶였던 전례가 없다. /뉴시스

평화당 23일 익산 핵심당원 연수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임정엽)이 전주에 이어 익산 핵심당원 연수를 추진하는 등 내년 4·15 총선에 대비한 조직정비에 나섰다.

평화당 전북도당은 오는 23일 오후 4시부터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익산 갑·을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연수를 실시한다.

이날 당원연수에는 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 임정엽 도당위원장, 김광수 사무총장과 박주현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당원연수 주요 프로그램은 선거연수원의 ‘정치관계법 이해’ 당원교육과 정치평론가 출신 민영삼 최고위원의 특강 등이 마련됐다.

특히, 조배숙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익산을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번 익산 당원연수에는 익산 갑·을 지역위원회 핵심당원과 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